

여야 “노무현 정신 계승” 서거 15주기 한목소리

국힘 “협치하는 국회 희망”
민주 “국민의 삶 지키겠다”
군소정당들 “盧 꿈 이루겠다”
22대 국회 원구성 신경전도

여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통합과 상생, 타협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국민을 위해 통합과 상생을 꿈꿨던 노 대통령을 기억한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 늘 영원히 우리의 나침반으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그들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날선 공방도 펼쳐졌다. 김민진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

형을 이뤘다”라며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석 대변인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고집불통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한 집권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고 여당을 비판했다. 군소정당들의 추도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SNS를 통해 “탈 권위주의 정신과 지역주의 타파, 반칙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가 우리 사회와 민주 진보 진영에 이어지고 있는지 성찰할 때”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길 잃은 한국 정치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추도식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광주시당 “노무현 정신 받들어 국민에 헌신”

노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추모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고 추억했다.

광주시당은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 국민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했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 전 대통령의 시대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

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 국민의 꿈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무시한 열 번의 거부권 행사,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거부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시기다”며 “광주시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기자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강은 양면’ 작전

국힘 의원에 ‘가결 호소’ 친전 정부에 ‘탄핵, 국민적 유행’ 압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강은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가결 호소’ 편지를 보내는 회유책을 쓰면서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이 국민적 유행이 될 것 같다’고 압박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여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데 이어 여당의 채상병 특검 반대 논리인 ‘수사 우선’,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이 공정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고, 브리핑 조항 역시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사 정원이 20여 명 남짓한 작은 기관이어서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탄핵 카드’를 동원한 압박 전략도 펼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책적 사안에서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제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

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당을 향해선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 투쟁이 일어난다”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7당 지도부는 2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2019년 이후 4년5개월만
3국 정상 공동성명 발표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리 총리 방한은 지난해 총리 취임후 처음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이다. 3국 정상은 27일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尹 결단없이 연금개혁 불가”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
정부여당안 수용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특위를 통해 초당적 연금개혁이란 목표를 내걸고 잘 해왔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게 아니다”라며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2%p

(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겼고, 그다음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한 말에 따라 그 후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꼭 성사되려면 성사돼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없이 연금개혁 없이 추진될 수 없다. 다시 바꿔말하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임기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